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참조35)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주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02
----------	------

발의연월일: 2024년 월 일

발 의 자: 박주윤, 황금석, 박종각, 이영경,
안극수, 추선미, 구재평, 정용한,
안광림, 김보미, 서희경, 박은미,
박경희 (이상 13명)

□ 주 문

- 성남시 원도심의 합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으로 인한 하수악취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제안이유

- 최근 생활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민감성이 증대되고 생활환경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하수악취에 대한 민원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임
- 성남시 원도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하수악취의 근본적인 문제인 합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성남시의회는 하수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 붙임 :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부.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남시 원도심의 합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으로 인해 하수악취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생활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민감성이 증대되고 생활환경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하수악취에 대한 민원은 2015년 전국 1만5천여 건에서 2021년 3만9천여 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수악취 발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빗물과 오수가 혼합되는 전통적 하수도 방식인 합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우수토실, 복개하천, 도로변 빗물받이 등 악취 발생원에 대한 관리 취약도 악취 발생의 부수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하수관거의 총연장은 163,099km로, 이 중 합류식 하수관거는 약 42,000km로 25%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성남시의 경우 원도심인 수정·중원구의 경우 총연장이 699.42km에 해당하는데, 이중 합류식 하수관거는 412.69km인 59%로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원도심 내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와 산성역 포레스티아 그리고 중원구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입주민들을 포함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수 만 세대의 지역 주민들은 최근 이루어진 도시정비사업으

로 대부분 입주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분류식 관로 설치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정작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한 하수악취 민원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수악취의 원인 물질인 황화수소(H_2S)는 기준치 이하의 저농도의 경우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진 않지만 냄새로 인한 불쾌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이며, 기준치 이상의 수치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황화수소 흡입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다수 있는데, 2019년에는 기준치 이상의 황화수소를 흡입하여 10대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2020년에는 맨홀 청소를 하던 작업자 4명 중 2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을 정도로, 하수악취를 단순히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사안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하수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스마트 하수관로 하수악취 관리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포항시, 군포시 5개 지자체에 총 예산 1,105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사업대상 중 합류식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이 11.6%에 그쳐 하수악취 민원 전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국비 지원을 통해 합류식 하수관로의 절반 이상을 분류식 하수관로로 변경하는 작업을 마쳤고,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고양시, 익산시 등 각급 지자체에서도 하수악취저감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성남시에서도 하수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하수악취 발생 지점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그저 임시방편일 뿐, 이를 장기적으로 방지하게 되면 악취의 농축과 역류현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하수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경부는 하수악취의 원인 물질인 황화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신기술인증’을 적용한 악취제거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환경부는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각급 지자체에 하수악취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성남시는 원도심에 분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반영하라.

2024. . .

성 남 시 의 회